

# 병원 노사문화, 이젠 바뀌어야 한다.



글·성상철 |  
서울대학교병원장

그토록 진통을 겪었던 보건의료산업 임단협 산별 교섭 조인식이 8월 17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있었

다. 산별교섭 원년으로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노사가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커다란 성과이자 의미있는 일이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많은 병원들이 산별합의의 정신에 따라 파업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동조합에서도 파업을 결정할 경우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하지만 이번 산별교섭은 우리 병원계에 많은 문제점과 숙제를 함께 남겼다.

첫째, 병원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많은 중증 환자들을 외면하고 장기간의 파업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특히 수술 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암환자 등 많은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무기 연기되거나 취소되었다.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명분이야 어떻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이러한 장기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환자에게는 생사기로서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찾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치료기회를 봉쇄하는 파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일부 노동조합 지부에서 산별합의 자체를 부정하고 불법파업을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별합의 내용에 불복하고 이중 교섭 형태를 보임으로써 과연 향후 산별교섭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 산별교섭이라는 새로운 교섭형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셋째, 파업에 따른 병원의 손실이 너무 컸다.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수술과 입원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 파업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은 병원이

2005년에는 분명 노사문화가 달라져 있어야 한다. 의료시장개방과 더불어 무한경쟁시대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에 모든 정열을 소진하는 현재의 우리 병원계. 노사가 모두 공멸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의 노사 문제는 타산업과 달리 노사 이전에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도 요구된다.

오랫동안 안고 가야할 부채로 남게 되었으며 장기파업으로 깊어진 직원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그리고 병원의 경영진을 적대시하는 투쟁 양상을 보인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러한 노사문화로는 희망찬 21세기를 열 수 없다. 2005년에는 분명 노사문화가 달라져 있어야 한다. 의료시장 개방과 더불어 무한경쟁시대가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에 모든 정열을 소진하는 현재의 우리 병원계. 노사가 모두 공멸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병원에서의 노사 문제는 타산업과 달리 노사 이전에 환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도 있어야 하기에 감히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환자진료시설인 병원 내에서의 파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진정 환자를 위해서라면 병원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행위, 피켓을 들고 병실 및 진료시설을 순회하는 행위, 병원 내 대규모 방송시설을 동원한 집회를 여는 행위 등 환자에게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 어떠한 쟁의행위도 병원 내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시위든 파업이든 병원 밖에서 해야 한다.

둘째, 필수 환자진료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하여는 파업참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중환자실, 수술장, 응급실, 항암시설 등 환자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자가 환자를 외면하고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셋째, 산별교섭 방식도 병원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병원의 규모나 운영형태에 따라 일부 수정,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업종간 근무형태나 환경 등이 유사한 경우라면 몰라도 병원계와 같이 설립목적, 지역, 규모 등이 천차만별이고 임금, 근로조건 등의 수준 차이가 큰 경우에는 산별교섭을 통한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바람직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의 노사문제는 국민의 생명권 수호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위로형 서비스 업종이며, 봉사적 소명의식이 각별히 요구되는 의료서비스업의 현장은 환자권리장전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보호되고 지켜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병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밝은 미래를 설계하려면 win-win의 발전적 노사문화가 새롭게 정착되어야 한다. 어려운 의료환경... 위기에 처한 병원을 구하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2005년에는 금년 같은 병원파업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